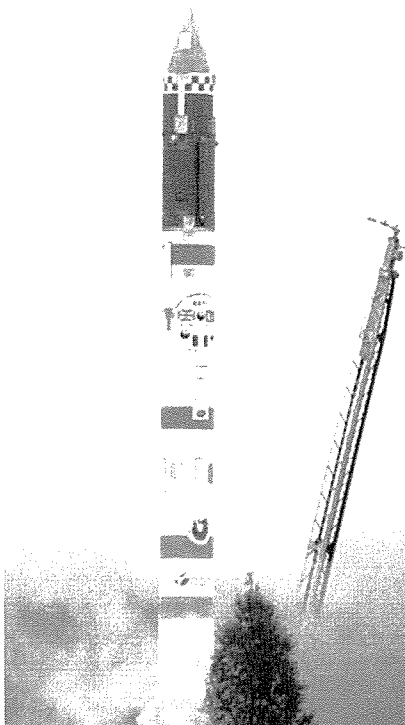


지금 과학기술계가 해야 할 일

글_곽재원 중앙일보 경제담당 부국장 kjwon@joongang.co.kr



우주과학실험용 위성인 '과학기술위성 1호'가 러시아의 'COSMOS-3M' 로켓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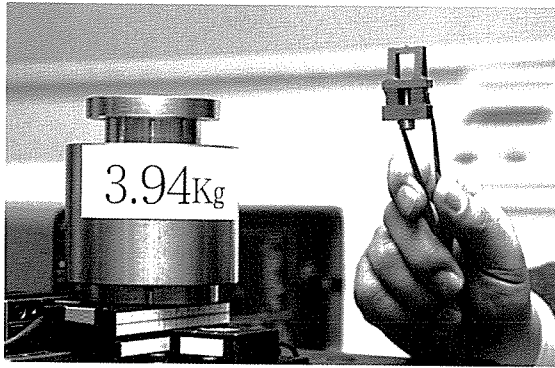
내년도 정부의 과학기술예산(안)은 올해 5조6천91억 원에서 8.0% 늘어난 6조559억 원으로 잡혔다.

이 증가율은 내년도 전체 예산의 증가율이 2.1%에 머무는데 비하면 대단히 배려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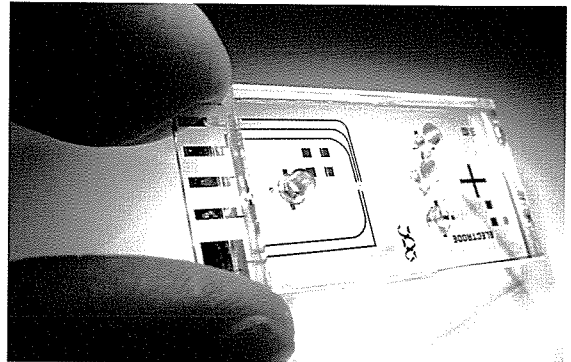
특히 정부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건설'에 두면서 크게 늘린 사회복지부문(9.2% 증가)과 한·미 동맹체제의 변화 속에서 역시 중점 배분한 국방비(8.1% 증가)의 증가율에 버금가게 과학기술예산을 대우해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SOC와 산업·중소기업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축소를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런만큼 과학기술계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우선 재정운영계획에서 나타난 국가목표를 볼 때 과학기술 부문이 해야 할 일이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다.

내년도 사업의 뼈대인 국가균형발전지원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인재양성과 지방대 육성), 동북아 경제중심 구현(동북아 거점 첨단산업기지 구축, 광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동북아 R&D허브 구축, 첨단부품 소재의 글로벌 소싱 기지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미래대비 투자(연구



KIST 윤석진 박사가 개발한 리니어모터로, 최소 4nm의 정밀도로 모터를 움직일 수 있다. 고집적 반도체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각광을 받고 있는 랩언어칩. 하나의 칩으로 혈액 중 적혈구, 백혈구 숫자를 셀 수 있는 등 초소형 실험실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발확충과 차세대 성장동력개발, IT강국 기반강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참여복지구현 및 삶의 질 향상(환경, 주거관련 기술지원)등은 하나같이 과학기술부문의 중핵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예산 6조원 중 약 20%에 해당하는 1조2천억원이 과학기술부에 배분됨으로써 과기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선도해야 할 책임도 크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과학기술계가 해야 할 일을 짚어보자.

첫째, '산 정책' 과 '죽은 정책' 을 엄별해야 한다.

정부내의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추진계획들을 재점검해 국가목표와 각 부서의 실행계획들을 잘 매치시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방향성 없는 관행적 연구개발이나 나눠먹기식의 자금배정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죽은 정책' 이다.

때문에 정책의 발신지인 과학기술부, 국가목표에 맞도록 정책을 종합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의 방향성을 지도하는 과학기술자문위가 삼위일체가 되는게 절실한 시점이다. 그래야만 이노베이션과 수요창출의 호순환을 지키는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연관표를 작성해야 한다.

산업은행이나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산업연관표는 기술산업의 융합시대에는 잘 맞지않는다. 기술의 발전방향과 파급

효과, 확대된 신산업의 영역까지를 담은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교육, 인력, 지역경제, 국제경쟁력 문제들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다. 자원의 선택과 집중도 가능해 지는 것이다.

셋째, 대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내 박사급 인력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이 언제까지 국가의 기술 산업경쟁력과 무관하게 기초연구만 한다고 주장하게 할 것인가. 대학을 대폭 지원하되 많은 책임을 지워주는 대책이 시급하다. 산학연의 연계도 여기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넷째, 국가의 결속력을 보여줄 스타 프로젝트를 1~2개 찾는 일이다.

중국의 유인우주선발사와 같이 국가위상을 높이면서 국민들을 한데 묶어 줄 빅사이언스를 이제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는 10~15년을 내다본 미래 프로젝트인만큼 가능한 한 단기적으로 예산에 주름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적 컨센서스를 배경에 두고 있어야 한다.

끝으로 이런 작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과학기술정책이 확실한 얼굴을 가져야 한다.

예컨대 이러저러한 환경 아래서 2004년은 '생산적 과학기술' 이라든가 '지식이노베이션형 과기정책' 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정의를 해줌으로써 정책추진의 구심력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㉔